

오피니언

김남로에서

김우성



난세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여야 정치권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여야 정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져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직 국회의장 검찰 소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질 태세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 안철수 교수의 등장은 우리 시대 신선한 희망으로 다가온다. 1500억 원의 통 큰 기부도 물론 50%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5% 지지에 불과한 사람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선듯

애제자의 세배를 받고 "올해엔 날 좀 닮아 살아보게" 하는 대답에 "그러면 바보 되게 요"라고 대답하자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아가야 얼마나 어려운데"라며 받아넘겼다는 말은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또 한 명의 바보는 지난 2009년 선종환 김 추기경. 그는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종교 지도자로, 우리 사회 큰 어른으로 평생을 약자 편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 역시 '바보 김수환'이라는 애

이제 우리는 또 한 명의 바보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 연일 인기 상승가를 치는 안교수가 바로 그다. 신선하다. 훈훈하다. 역시 그답다는 말 외의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다. 서울시장 후보 양보에 이어 보유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새삼 우리 사회의 설 자리와 갈 길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지도자 반열에 서 있다.

不用之용으로 희망 주길

많은 국민은 안 교수가 정치를 잘해서 살았냐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대한민국이 '희망 코드'로 남아 정치권 밖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 과욕일까. 본연의 길이 있는데 자꾸 정치무대에 뛰어들라고 짐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회창, 고건, 정운찬 등 전문 식견을 가진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 실패한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안 교수는 굳이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대 성자(聖者=바보)로서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용지용(不用之,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서 쓰임새의 가치를 지킴)의 의미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부디 대한민국의 사회적 리더로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논설위원〉wskim@kwangju.co.kr

안철수와 우리 시대 바보들

양보하는 등 감동의 연속이다.

돌이켜 보면 속칭 '바보'라는 애칭을 받으며 어둠을 밝힌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역사는 늘 살아숨쉬고 있지 않나 싶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장기려 박사,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대통령 등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시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지난 1995년 타계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는 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돌봐줬다. 그는 40여 년간 병원 운영을 했지만 물려날 땐 변변한 집 한 채 없었다. 설날 한

침을 받으며 암울한 시대에 정의의 외치고, 우리에게 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해 5월 서거한 '바보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러는 세계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 신명나게 사는 세상'이었다. 생전에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는 영원히 남을 수 없는 벽이었을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국민은 지켜주지 못하는 데 대해 미안해 했고 심지어 야당 지도자조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려, 김수환, 노무현

이런 마당에 정부와 청와대를 탓해 무엇하랴. 온갖 실정에 인사정책까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편중으로 일관하다 국민 분노마저 사고 있다. 실상가상, 잇달아 타진 대통령 측근 비리는 MB 퇴임 후 또다시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은편칼럼



임명재

바야흐로 선거의 해가 도래하였다. 총선과 대선이 연거푸 있는 해이다. 흑룡의 해라 하니 승전을 위해 용맹함을 하는 수많은 후보가 벌써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다.

SNS에 의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나꼼수'와 같은 정치풍자가 정통뉴스의 영향력보다 오히려 크다고 평가받는 것을 보면 올해는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 열풍이 대단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은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극복해야겠다는 절실함이 예나저나 된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이명박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젊은이여 자신을 위해 표를 던져라

그가 공채사원으로 출발하여 회사의 대표가 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잘 풀어서 국민 모두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대통령의 '747공약'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투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747 점보제트 기처럼 비싼 것은 소위 대한민국 1%의 부자들이고 99%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더욱 암울해졌다. 흑룡의 해지만 개천에는 흑룡의 꿈을 품는 미꾸라지나 지렁이 한 마리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고 말았다. 개천에 사는 젊은이들은 주유소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겨우 차지해야할 정도이다.

오로지 학교에서 공부만 해서 인성역전의 신화를 써야겠다는 포부를 갖는 젊은이를 찾기가 불가능해져가고 있다. 소위 각종 스펙을 쌓아야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데 그러한 스펙은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어가는 이유는 정권의 철학과 도덕의 수준이 그러한 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은 국민수준이고, 대통령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진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도덕수준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의 99%라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다. 그것은 경성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자기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뭔가 나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보스러운 것이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1% 정도의 부와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기본만 그럴 뿐 결국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조성광

사람들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라며 임진년 새해의 희망을 기대한다.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꼭 지켜리라 다짐한다. 아마도 새해를 맞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다.

개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진 임금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정조도 새해 첫날, 농사를 권장하며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정조 23년(1798년)에는 별도로 '권농정구농서유음'(勸農政求農書繪音)을 반포해 국가

임진년 새해 '권농유음'이 떠오르는 이유

〈勸農繪音〉

기반의 근본을 이루는 농업을 진흥하고 농업 문제의 타개책을 마련하게 했다.

올 해는 시작부터 농업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졌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소값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시름 또한 깊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 차에 6785억 원, 10년차에 99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 생산액이 증가해 피해액이 협상 시작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보면 피해가 커보인다.

임진년 정월애 정조의 '권농유음'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이런 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만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다. 이미 칠레를 비롯

한 7개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이고 앞으로 중국과도 협상 예정에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해 보이는 농·어업 분야가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시행중이고, 추가 대책으로 11조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올해 예산도 지난해 대비 3.7% 증액해 본격적인 대비 중이다. 이번 기회에 농·어업의 기반을 확실히 하고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신년 계획을 단단히 세웠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풀기 위해 꼭 지켜내야 할 계획이기도 하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통한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바탕

으로 해 농·어업을 식품 지역경관까지 포괄하는 2, 3차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어촌산업 육성 자원센터'를 설치해 향토자원을 발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국내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장기적으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공사에서 농업용 수출단지를 지정해 토마토·파프리카·딸기 등을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간척지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자본 경영이 결합된 대규모 농·어업 회사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큰 계획들과 함께 가장 바람이 되는 기본 마음은 '우리가 곧 농·어민이고, 우리가 가족이 곧 농·어민'이라는 사실이다.

남이 아닌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누구나 극복의 방법을 생각한다. 혼자서 아닌 함께하면 어려움의 무게는 무거운 느낌이 없을 만큼 줄어든다.

어려운 시기라고 낙심하는 농어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큰 마음이 되는 한 해를 기대해 본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전관예우 관행 막기 수임금지 기간 더 늘려야

일전에 국회가 의미 있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판사나 검사가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하기 직전 1년 이상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에서 다루는 형사 사건의 수임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당연히 막 퇴직한 판검사들이 재판이나 수사에서 후배 판사나 검사들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 전관

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전관예우와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한 의원이 들고 나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즉 2007년부터 작년 여름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법원에서 판사도 근무하다 퇴

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193명 중 171명(88.6%)도 퇴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곳에서 개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가. 전관예우 특혜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갓 퇴직한 전관 판검사들이 변호를 맡은 사건일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부상으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고, 피고인에게 징형유예가 선고되는 비율도 높다는 통계가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갓 퇴직한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가 훨씬 비싸다고 한다. 이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전관예우 특혜를 받아 구속된 사람이 풀려나고, 유죄를

받을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관행이 계속되는 한 검찰도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형사 사건만이 아니라 민사 사건도 수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민사 사건이라고 전관예우 관행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수임 금지 기간도 2~3년으로 늘려야 금지의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본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희동

시설

대학 등록금 인하 생색내기 그쳐서야

올 대학 1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실현에 부흥하던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야 정치권이 반값등록금을 외친데다 정부도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인하 입장을 피력했으나 신학기들이 대학들의 실제 인하율은 3~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국립대들은 올 1학기 등록금 인하율을 5%로 결정, 학생 1인당 부담을 더는 게 10~12만 원이 고작이다. 더욱이 사립대들은 인하 여부에 대해 타 대학 눈치를 살펴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인하를 하더라도 3~5%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등록금 인하가 생색내기식으로 이뤄져 오히려 실망감만 더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당초 기대와 괴리를 넘어선다. 정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학 등록금은 2002년 정부가 국·공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한 이후 급증했다. 2001년만 해도 4.9%였던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2~2008년 매년 7.4~10.3%씩 치솟았다.

그렇지만 정부의 공교육비 지원은 다른 나라 보기에도 참피할 정도로 인색하다.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국내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의 절반 수준이다.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 학생부담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 눈치를 살펴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인하를 하더라도 3~5%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등록금 인하가 생색내기식으로 이뤄져 오히려 실망감만 더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당초 기대와 괴리를 넘어선다. 정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와는

정부, J프로젝트·새만금개발 싸움 붙이나

정부가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J프로젝트는 정부의 비협조로 사업 추진에 협력이 예상되는데다 새만금 개발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지원은 50년 장기 임대 특례를 관광사업을 하려는 국내 기업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새만금 내에 국제업무구역(국제비즈니스, 컨벤션, 숙박)과 레저·생태관광(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등의 개발계획이 J프로젝트 개발용도와 겹친다는 점이다.

두 사업 모두 민자로 추진되는 상황에 투자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 사업이 꺾릴 공산이 크다. 특히 양지역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다보면 호남권 분열양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만금 J프로젝트는 정부가 지원은커녕 막발을 잡고 있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4개 개발지구 가운데 구성지구를 제외한 부동지구는 아예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상호지구는 감정평가가 중단된 채 담보상태에 있다.

정부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J프로젝트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마당에, 후발 주자로 출발한 새만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도 모자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있을 법한 일인가.

또한 새만금도 호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J프로젝트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도록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새만금사업 개정안'을 철저히 되, 양 지역 모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선정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여론 형성의 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학술 가운데 하나인 '침묵의 나선 이론(The spiral of silence theory)'은 '왕따'를 두려워하는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 학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웃들의 생각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있으며, 대다수의 의견이 자신의 그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설령 다른 의견을 말했다가 자칫 왕따가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숨긴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의견이 대다수 이웃의 그것과 다를 경우 더욱 공개적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며,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 마침내 특정 의견만이 사회 전체의 의견 것처럼 득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골자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여론과 일치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며 소외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침묵의 나선'을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며, 왕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셈이다.

문제는 중세와 근대를 거쳐오며 치열하게 벌어졌던 인간 이성과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성이 유독 학교와 직장에서 '왕따' 문제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또 이를 유롭게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서기를 꺼리는' 기존 교육 체계에서 성장한 이들이 지금 학부모나 교사가 되면서 '침묵의 나선'

을 '조금씩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왕따를 조장하고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연결된 소셜미디어(SNS)가 넓은 교육시스템과 구세대와 뒤떨어진 생각을 전복시켜주길 기대한다.

/홍행기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